

이해찬 “대통령을 적·위협이라 하다니”
與, 황교안-나경원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근거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최근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는 지난 27일 당원교육행사에서 ‘우리의 대적, 이겨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나”라며 격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국군통수권자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상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끌어간 안 된다. 대신 이런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본 발언이 아닌 비공개 회의의 전황 전 추가 발언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추가 발언까지 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최고위원들은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을 한 황 대표에게 총공세를 펼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청와대 및 정부의 외교라인 전면 교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지금 안보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한반도 위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그 시절과 현 상황에 대해 차분히 비교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것이지만 황 대표의 군사합의 폐기 주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황 대표는 대북제재 강화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뿐 아니라 미·중·일·러 등 국제적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한반도 냉전 체제는 이른바 한국 보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해 지켜주는 방편이었다”며 “북한의 최근 행위가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한국당의 주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52.1% 잇단 안보 악재에 상승세 주춤

2주째 상승 불구 北 미사일 발사 등에 상승세 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외교·안보 악재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7월 4주차(22~26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2.1%(매우 잘함 30.9%, 잘하는 편 21.2%)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역시 0.6%포인트 오른 43.7%(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5.3%)를 기록했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8.4%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주간 집계 기준으로 2주째 상승세(7월 2주 47.8%, 7월 3주 51.8%, 7월 4주 52.1%)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중국의 영공 침범 사건 등으로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주중 집계(22~24일·잠정치 성격)에서 54.0%까지 상승했지만 주간 집계(22~26일·확정치 성격)에서는 52.1%로 마감됐다.

일간 지지율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여론 확산에 22일 52.0%, 23일 54.0%, 24일 54.4%로 상승곡선

을 그쳤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25일에는 52.6%로 반락한 뒤 26일에는 49.2%까지 떨어졌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3.0%→50.3%, 부정평가 42.9%) ▲광주·전라(69.6%→72.5%, 부정평가 24.0%) ▲서울(52.6%→54.0%, 부정평가 42.2%) ▲60대 이상(35.8%→39.4%, 부정평가 54.8%) ▲50대(47.9%→49.1%, 부정평가 47.4%) ▲보수층(17.8%→23.8%, 부정평가 73.3%)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43.0%→37.9%, 부정평가 57.3%) ▲부산·울산·경남(46.6%→42.8%, 부정평가 54.5%) ▲40대(69.3%→65.0%, 부정평가 31.0%) ▲30대(61.7%→60.6%, 부정평가 37.0%) ▲중도층(51.9%→50.9%, 부정평가 46.4%)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 935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2명이 응답을 완료해 5.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태 “전술핵 배치해야”…한국당, 또 다시 핵무장론 등장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등 핵무장론이 또 다시 등장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러시아가 우리 대한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즉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해병대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50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핵을 결코 포기할 의도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1992년 이전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다.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서명하면서 전술핵이 철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돼

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만약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알잡아 보겠냐”고 했다.

최근 한국당 내에서 핵무기 무장론은 올해 초 전당대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당대표 경선에 참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저는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에 도움 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야당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핵무장은 (한국당이) 출기차게 주장해왔고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성명발표 및 간담회'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 문병호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바른미래 당권과 “孫 퇴진 요구는 한국당과 ‘합당’ 추진 위한 음모”

“양당에 바른미래당 팔아먹으려는 시도에 저항해야”

바른미래당 내 순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인사들은 29일 바른미래당계 손 대표 퇴진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려는 지속적인 당권 찬탈 음모”라고 강력 비판하며 혁신위원회 해체, 손 대표 퇴진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내 순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을 열고 성명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지율 하락의 모든 원인을 당 대표 혼자만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다치고 퇴진’ 요구는 부당하며 퇴진파의 음모적 계산이 깔려있다”라며 “같은 세력 조종을 빚은 몇몇 혁신위원들이 내놓은 혁신안은 오로지 당대표 퇴진만을 전제로 한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모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은 자한당(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려는 바른미래당계 지속적인 당권 찬탈 음모이고 매당행위”라며 “당 대표 퇴진 당권 찬탈의 도구로 전락해 심각한 당 분열과 지지율 정체를 초래하는 혁신위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당 윤리위는 (이해훈 의원의) 몸값 운운 발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기호 3번 출마 약속을 어기거나 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엄중히 징계하

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 퇴진 요구 및 최고위 불참 등 중대 계파를 초월한 평당원협의회 결성 등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문병호 최고위원, 100여 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이 자리했다.

김관영 의원은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제 더 이상의 내분을 종식시키고 결단해야 한다”라며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순학규 대표 세분이 모여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국민 앞에 세분이 손잡고 다시 자강의 길을 가도록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당의 유승민 의원과 이해훈 의원을 향해 “제3의 길을 고수하겠나 보수 대통합인가, 기호 3번인가 2번인가 답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어차피 귀국할 것이면 빨리 귀국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바른미래당은 제3의 길, 양당과 다른 새 정치 노선으로, 새 정치 세력으로, 새 정치 체제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며 “우리 당을 기성 양당에 팔아먹으려는 시도에 대해선 강력 저항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